

전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추진

전북생생TV 등 언론매체 통해 적극적 홍보·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등 방안 마련

자치단체의 전시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점운영 상태인 가운데 전북도가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신고된 사례는 단 6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채택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나머

지 59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나 단순의견 게시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로 이관 처리 됐거나 제도안내 후 종결 됐다.

전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화 혹은 서면상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은 마찬가지.

실제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2011년에 총 35건, 2012년 4건,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5건에 그쳐 연평균 5건 정도이다.

특히 도는 예산낭비 신고 채택시 정 상경비 절감 시 절감예산의 50%, 주 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시 절감에 산의 10%, 사업 수익에 대한 수익 증대시 증대액의 1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성

과급이 한차례도 지급된 경우가 없어 단순의견 게시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로 이관 처리 됐거나 제도안내 후 종결 됐다.

실제 도와 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민들은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운영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낭비성이나 심심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 올해 올해 초부터 센터 운영의 개선 방안 강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 북생생TV, 도청 앞 LED 전광판 일주

전북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더라도 2단계 혹은 3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첫번째 화면에 드러나게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 예산절 감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전 직 원 및 유관기관(출연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민이 예산낭비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가 등록된 상태 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군산해양수산청 14억원 투입 3곳에 항로표지(등표) 설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훈)에서는 선박항로상에 있는 위험요소인 간출암 3개소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항로표지(등표)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예정지는 군산시 관할해역 비안도 1개소 부안군 관할해역 위도서방, 외조도동방 2개소에 높이 20.9m~26.1m 규모의 등표를 설치한다.

비안도 인근 암초는 저조사에는 노출이 되고 만조사에는 수중에 수몰되는 간출암으로 만조시 위치 확인이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위도서방과 외조도동방 등표 설치 예정지의 경우에는 통항 선박의 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항로표지 설치요구로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군산해양수청에서는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인등대 2개소 무인등대 60기 등표 40기 등 182기의 항로표지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해양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의 기능유지와 야간 시인성 개선, 노후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선박의 항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했다.

전북도, 정보 소외계층 그린PC·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진행

전북도가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과 저소득층·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그린PC보급·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컴퓨터 기초과정부터 동영상 제작·포토샵· 파워포인트·엑셀 등 정보화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약 10개월간 무료로 진행한다. 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600대의 PC를 보급하게 된다.

장애인과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 홈페이지(https://lovepc.nia.or.kr)에서 신청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시각과 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와 스크린리더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220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한·미, 내일 북 핵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국방부는 한·미 양국 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반 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의 주관으로 열리는 첫 연례 훈련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적극 대응키 위한 한·미 양국 군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위협하는 가상 상황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정치·군사적 수준의 위협을 평가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등 한미간 북한의 핵 확장 억제 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포함된 최상위 개념이다. 동맹국과 우방국에 미군이 보유한 핵무산·재래식전력·미사일방어(MD) 능력 등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미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 공동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 DSC다.

/박홍주기자

정부 '법질서 장관회의' 신설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 확정

정부가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척결 19개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황 총리 주재로 매달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법질서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를 번갈아 논의할 방침이다.

법질서 분야의 주요 논의사항은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외식 제고,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 간 현안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올해 법집행기관 우선추진과제로 법무부 등 8대 기관에서 19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기업·경제질서 분야 비리 ▲법조브로커 등 전문 분야 비리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행위 ▲생활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행위 ▲소비자 밀접분야 불공정약관·부당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부유출·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내부자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 추심·끼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보험사기) 등을 다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건강·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집중 관리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등 과제를 맡았고 국제청은 ▲역외탈세·기업자금 유출·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등을 담당한다.

관세청은 ▲블랙머니 조세차단 및 단속 강화 ▲불량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엄격한 관세조사 및 체납 관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 등 과제를 맡았다.

경찰청은 ▲3대 악성사기(전화금융사기·노인 및 중소기업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3대 대표물건(차량·휴대전화·보증) 등 사회적 신뢰 훼손행위 등을 다룬 예정이다.

/안진수기자

스피치·응변·면접·리더십·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양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케어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